

# 문 의장 사법개혁안 직권상정 결단 내리나

문 의장-여야 3당 협상 결렬  
민주 “숙려기간 끝났다”  
한국당 “합의없는 처리 불법”  
문 의장, 오늘 부의 가능성



손은 잡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르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법개혁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야는 28일 평행대치를 이어갔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라며 법안 처리 방침을 밀고 나가는 여당과, 공수처가 '정권의 칼'이 될 것이라며 반대를 굽히지 않는 제1야당의 대립만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재확인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이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부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문 의장에게) 드렸다"며 "(다만) 다른 정당 원내대표들은 다른 의견을 말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일 부의는 불법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안 그래도 패스트트랙의 모든 절차가 불법과 무효로 정결해 있다. 이 불법적인 부의에 대해서 할 수 없이 법적인 검토를 거치고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9일 부의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갖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며 "최초로 헌정 역사에 남기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주시사 (문 의장에게)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29일 검찰개혁 법안의 입장"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실무를 하거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29일 부의가) 된다고 한다"며 "이것은 내가 알아서 할 문제"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 의장은 법조계 등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에 두루 법안 부의와 관련해 자문한 결과 29일 법안 부의에는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별다른 계기가 없는 한 문 의장이 29일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상정은 하지 않고서 여야 간 합의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개혁안 뿐 아니라 패스트트랙의 또

다른 축인 선거제 개혁안 처리방안까지 얽히면서 정국 함수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협조를 얻어야 하는 군소 야당들은 선거제 개혁안 선(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에서는 의원정수 확대론도 다시 꺼내 들었다.

이에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의당과 한국당의 대치 전선도 형성되는 기류다.

민주당은 이날도 공수처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을 향한 '실적'을 이어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벌이고 있다"며

"공수처는 공정수사처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 의원정수확대를 비롯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하는 한편, 경제 문제 등으로 대역(對換) 공세를 펼쳤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뿐 아니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나라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법안들을 '날치기'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 없이 이인들이 날치기 처리된다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한국당-정의당 '의원정수' 설전

한국당 "확대 주장 바그릇 본색"... 정의당 "지난해 합의"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28일 선거제 개혁 법안의 '뇌관'으로 떠오른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당이 준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기 위해 영혼을 팔고 민주당의 2중대가 돼 불의한 조국(전 법무장관 옹호)에 앞장선 것을 우린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며 "국민은 그래서 불의당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 처지가 의원정수를 확대하자는 것은 정말 염치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정치개혁, 선거개혁 전부 핑계였다. 결국 속내는 국회의원 배지 욕심, 정의당 의원 수 늘리기 욕심이었다"며 "드디어 바그릇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예산 동결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 10% 이내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이 (작년 12월 5당 원내대표가 이룬) 당시의 합의"라며 "나 원내대표는 정수도 줄이고 비례(대표)는 없애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은 대국민 약속이었던 5당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거면 더 이상 패스트트랙 공조를 방해하지 말라"면서 "패스트트랙 불법 폭력을 앞장섰던 의원들에게 국민 보는 앞에서 표창하는 조폭만도 못한 부끄러운 행태를 중단하고 즉각 검찰 수사에 책임 있게 응하라"고 촉구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이인영 "특권 없는 공정사회로 나가자"

민주당 교섭단체 연설...공정 경제 등 9대 과제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인사청문회를 정책과 능력 검증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 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많은 국민들은 후보는 실종된 채 각종 정문회가 되고 정책과 능력 검증은 사라진 채 수많은 의혹이 부풀려지고 신상이 털려나가는 이런 비인간적·비인격적·비인권적 정문회는 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내용을 비롯한 공정사회 4대 과제 및 공정경제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과 관련, "지난 20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야당일 때 여당일 때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오직 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이 해체되고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법 처리와 관련, "선거법과 관련해 한국당과 반드시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군소 야당에 "때가 되면 더욱더 단단해진 공조와 협지로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함께 완수하자"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유례없는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을 맞아 예산과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의 역할이 크고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한국당은 긴급한 경제 현안을 상임위원회에 묶어두고 '오직 조국'만 외쳤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국회리스크' '야당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노동자와 기업인 간의 상생 협력 ▲수도권과 지역 및 도농간 균형 발전 등을 '공존 경제 5대 과제'와 이를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를 제시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예결위 내년 예산안 확장재정 찬반 공방

민주당 "세계 경제위기 선제 대응"...한국당 "재정 건전성 우려"

여야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 정부 예산안 편성의 적절성 및 확장재정에 대한 찬반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등 글로벌 경제 위기를 고려하며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요구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지난해 예산 확대로 재정 건전성이 훼손돼

서는 안된다며 현 경제상황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적자국채 발행액이 무려 60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미래 세대로부터 가불된 예산"이라면서 "미래세대의 '등골 브레이크'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또 "향후 미래세대의 1인당 조세부담액은 (현재보다) 5배로 늘어날 것"이라면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동안 겪은 '악어의 입' 사

례를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입은 줄어드는 가운데 세출이 늘어나면서 마치 '악어의 입' 모양처럼 두 개의 그레프가 점점 벌어지는 상황을 가리킨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먼 미래로 생각했던 저출산·고령화의 압력이 현실로 등장했다"면서 "생산가능인구가 벌써 줄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가 현실화하는 것에 대응해야 하며, 그것이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이라고 옹호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우리 경제가 미중 무역갈등이나 여러 대외여건이 안 좋다"면서 "경제 성장

률이 많이 둔화해 그것도 우리의 수출 부문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민간 소비도 위축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며 대외여건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금 기회를 놓치고 재정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후대가 더 큰 부담을 안게 되고, 복지부담도 더 늘어나게 된다"라면서 "그때그때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적자 폭은 재정의 감당 능력과 대비해가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채비율은 39.8%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에서도 좋은 편"이라며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설명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조오섭 전 규발위 기획관 광주 복갑 출마 공식화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조오섭 전 소통기획관이 28일 내년 총선 광주 복귀를 공식화했다. 조 전 소통기획관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첫 단추를 끼우고 돌아와 이제 광주 시민 속에서 대통령의 의지를 나누고자 한다"면서 "시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 중앙과 지역의 새로운 역할을 찾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6·7대 의원을 지낸 조 전 소통기획관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대통령후보 광주시당 전략기획본부장,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7대 광주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등을 역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